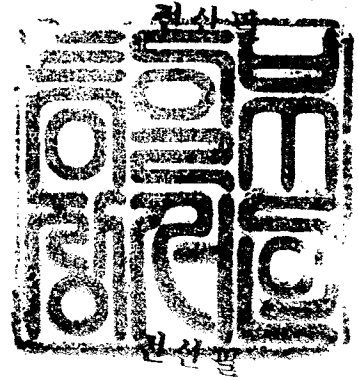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이 자료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강의하는 강사용 참고자료입니다.

강의시 필요한 부문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문 내용을 부록(Q/A)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통 일 부
(정책담당장관실)

《차 례》

| | |
|-----------------------------|----|
| I. 대북정책의 이해 | 1 |
| 1. 통일 환경의 변화 | 1 |
| 2. 대북정책의 목표 | 2 |
| 3. 대북정책의 내용 | 3 |
| 4. 통일방안과 대북화해협력정책 | 4 |
| II. 대북정책 추진 성과 | 5 |
| 1. 전쟁 및 도발 방지 | 5 |
|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 6 |
| 3.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대화 지속 | 6 |
|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7 |
| 5. 인적·물적 교류 증대 | 8 |
| 6. 이산가족문제 해결 전기 마련 | 9 |
| 7.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실시 | 10 |
| 8. 북한의 변화 | 12 |
| III. 최근 남북관계 현안 | 15 |
| 1. 북·미 관계 | 15 |
| 2. 이산가족문제 해결 | 18 |
| 3. 대북 지원 | 18 |
| 4.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19 |
| 5. 금강산관광 사업 활성화 | 20 |
| 6. 개성공단 개발 | 21 |
| 7.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22 |

IV. 대북정책과 국민적 합의24

- 1. '남남갈등' 현황24
- 2. 갈등의 원인24
- 3. 갈등 극복 방안25

V.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28

- 1. 남북대화 재개 및 합의 이행28
- 2. 북한의 호응 유도28
- 3.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29

VI. 맺음말30

<부록 1> Q/A31

- 1.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 2.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국민갈등만 생긴 것 아닌가요?
- 3. 우리의 안보태세가 약화된 것은 아닌가요?
- 4.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 5.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 6. 대북지원물자가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 7.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8. 반테러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요?
- 9. 남북한 통일방안은 무엇이며, 공통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록 2> 도표로 보는 남북관계41

1. 교류 협력 동향

(1) 인적 교류동향

- ① 남북한 인적왕래규모
- ② 이산가족 교류 동향 비교
- ③ 북한주민 접촉 승인, 성사 추이

(2) 남북 교역동향

- ① 남북 교역액 변동 추이
- ② 교역품목 변화 추이
- ③ 위탁가공설비 반출 추이
- ④ 위탁가공 교역 추이
- ⑤ 2001년도 주요 교역 품목
- ⑥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 ⑦ 남북간 물동량 현황

(3)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동향

- ① 경제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② 사회문화 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

2. 인도 관련 동향

(1) 북한 경제난 현황

- ① 공장 가동률
- ② 1인당 국민소득
- ③ 무역규모
- ④ 농민시장 의존도

(2) 인도적 대북지원 동향

- ①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비교
- ② 서독과의 지원규모 비교
- ③ 국가별 대북지원액 비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추이
- ② 2001년도 국내입국 연령별 현황
- ③ 2001년도 국내입국 직업별 현황

I. 대북정책의 이해

1. 통일 환경의 변화

-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 진행, 구 소련 해체 등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된 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정보화,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세계 속에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냉전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느냐',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동참하느냐' 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경제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 직면해 있음.
-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국력 격차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 남북간 주요 경제력 격차 : 명목 국민총수입(GNI) 대비 약 27배, 1인당 GNI 대비 약 13배, 무역규모 대비 약 169배(2000년 한국은행 통계)

-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한·미 군사동맹의 틀과 방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역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우리의 성숙된 민주주의식과 개방된 사회구조는 한반도 평화유지,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대북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우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2. 대북정책의 목표

- 남북 분단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목표 >

- ①한반도에서 전쟁 방지
- ②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 ③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 ④북한의 변화 유도
- ⑤점진적 평화통일 달성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며,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통일정책의 목표와 같은 것임.
-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임.
-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

3. 대북정책의 내용

-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내용은 당시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으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음.

< 우리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

- 7·4 남북공동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 발표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 : '남북의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북한의 유엔 국제기구 참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 20개 시범사업 추진 제의(1982) :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상봉, 설악산·금강산 공동관광지역 개방, 상호 방송 청취, 민족사 공동연구,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등
- 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 남북정상회담·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남북공동사무처 설치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분야의 3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1992) : 남북간 제반 실천 사항을 담은 합의서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1994) : 실무절차까지 합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 기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보완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2000)

- 현재 정부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기조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통일방안과 대북화해협력정책

- 남과 북은 지난 50여년간 대결과 갈등의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충격과 혼란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통일의 과정을 담고 있음.

<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 원칙으로 하여,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임.
 - 통일국가의 궁극적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1체제 1정부 1국가」이지만,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중간과정을 갖도록 상정하고 있음.
 - 남북연합은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의 남북 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는 체제이자 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임.
 - * 「남북연합」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①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②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민족공동체 형성 ③통일국가의 법·제도 마련 등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국가를 준비하려는데 있음.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1989년에 확정되고 1994년에 수정·보완된 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음.

- 현 대북정책 추진과정은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평화의 토대 위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임.

※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음.

II. 대북정책 추진 성과

-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평화공존을 목표로 '억지'와 '포용'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북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억지' 측면 : 전쟁 및 도발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 '포용' 측면 :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변화
- *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이며,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등으로 말하기도 함.

1. 전쟁 및 도발 방지

- 우리의 자주 국방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한미연합의 억지력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
 - 한편, 북한의 군사력은 경제난으로 인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 북한의 1990년대 훈련수준은 1980년대 말의 1/2~1/3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요 군사장비도 노후된 상태
- 연평해전('99.6.15)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단호히 봉쇄한 바 있음.
 - 연평해전은 안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 뿐만 아니라 대북화해협력정책이 군사력 억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임.
- 우리 국민들은 안보열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고, 우리의 국방태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중상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됨.
 -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함.
-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위해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개방함.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 경의선 비무장지대 공사관련 군사실무회담 5회 개최
- ※ 9·11 테러 및 미국의 반테러전쟁으로 인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과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국내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 외국자본 투자액 : 1962~1997년 : 246억불, 1998~2001년 : 520억불

3.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대화 지속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
 - 분단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나고 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임.
 -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음.

< 「6·15 남북공동선언」 의 의의 >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에 직접 합의·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있음.
-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음.
- 남북이 통일을 미래적 과제로 두고 우선 평화공존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였음.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인 이산가족문제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이 담겨있음.
- ※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

- 남북장관급회담(6회)을 중심협의체로 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21차례 열려 실질협력문제를 협의하였음.

* '98년 이후 총 37회의 당국간 회담 개최, 연평균 약 9회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서
 - 당국차원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 해운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민간의 활력에 기반한 경제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2001년 9월 우리측 구간 공사를 완료함.
-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였음.(2000.12)
 - 이 경협 합의서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임.
 - * 4개 합의서는 국회에 상정(2001.6 1)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북측은 「정부적인 심의 비준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힘(2001.1.18, 전화통지문)

5. 인적·물적 교류 증대

-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간 왕래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연평균 6,427명(총 25,706명)으로 1989-1997년까지의 연평균 왕래인원 331명에 비해 20배정도 증가됨.
 - 이와는 별도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1년 12월 말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국민도 428,094명에 이르고 있음.
- 1989년 1,872만달러로 시작하였던 남북교역은 1998년에 2억달러, 1999년에 3억달러로 증가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4억달러대를 기록하였음.

<인적 왕래 및 교역액>

| | '89~'97(9년) | '98~2001(4년) |
|------|----------------------------------|------------------------------------|
| 인적왕래 | 총인원 2,980명 (방북 2,405, 방남 575) | 총인원 25,706명 (방북 24,747, 방남 959) |
| | 연평균 331명 | 연평균 6,427명 |
| 교역액 | 총액 15억 4,569만 \$ | 총액 13억 8,348만 \$ |
| | 연평균 1억 7,174만 \$ | 연평균 3억 4,587만 \$ |

6.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의 실천인 동시에 남북 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로서,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왔음.
-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합의한 이후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3,6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였음.
- 방문단 교환(8,635명)과 생사·주소 확인 사업(2,267명)을 통해 총 10,902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음.
- 또한 3차례의 방문단 교환과정과 2001.3.15 서신교환(남북 각 300명)을 통해 총 662건의 이산가족간 서신교환도 이루어졌음.

<이산가족 관련 통계>

| | '89~'97(9년) | '98~2001(4년) |
|------|-------------|--------------|
| 상봉 | 155건 | 1,237건 |
| 생사확인 | 1,014건 | 3,049건 |
| 서신교환 | 4,047건 | 3,331건 |

7.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 대북지원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민족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함.

*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도 적극 참여

< 대북지원과 통일과의 관계 >

- 남북간 경제적 격차 및 문화적 이질성이 계속 확대된다면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물적 지원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은 훗날의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하는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한 국가내에서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지역이 후진적이고 저개발된 지역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통일의 저해요인이 될 것임.

-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 민간의 대북지원은 정부지원과 보완적인 구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자개량, 농자재 지원, 결핵 퇴치, 병원 현대화, 삼림 복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음.

- '98년 이후 2001년말까지 4년간 정부의 대북지원은 2,350억원으로 이전 정부 지원액 2,114억원과 비슷하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763억원으로 이전 정부에서의 197억원보다 9배 가량 증대되었음.

* 현 정부 들어 민간차원의 지원이 급증한 것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간부문의 교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임.

<이전 정부와의 대북지원 비교>

| 구분 | 계 | '98-'01: 4년 (현 정부) | 비율 | '95-'97: 3년 (전 정부) | 비율 |
|------|-------------------------|-------------------------|------|-------------------------|------|
| 계 | 6억 1,196만불 (6,424억원) | 3억 2,788만불 (4,113억원) | 100% | 2억 8,408만불 (2,311억원) | 100% |
| 정부차원 | 4억 5,005만불 (4,464억원) | 1억 8,833만불 (2,350억원) | 57% | 2억 6,172만불 (2,114억원) | 92% |
| 민간차원 | 1억 6,191만불 (1,960억원) | 1억 3,955만불 (1,763억원) | 43% | 2,236만불 (197억원) | 8% |

o '98년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정부와 민간의 총 대북지원액 4,113억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28억원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2,200원 정도임.

* 1,028억원 ÷ 4,700만명 = 2,187원

* 우리 사회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8조원, 처리비만 4,000억원 소요

o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 주요국가별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① 미국(5억 6,263만불), ② 한국(4억 5,005만불), ③ 일본(2억 5,537만불)의 순서임.

o 우리의 대북지원은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서독의 대동독 지원의 1/30 수준임.

<서독과의 지원 규모 비교>

| 구분 | 한국 | 서독 | 비교 |
|---------|---------------|----------------|------|
| 기간 | 1995-2001(6년) | 1973-1990(17년) | |
| 총 지원액 | 7억불 | 574억불 | 1/82 |
| 연평균 지원액 | 1억 774만불 | 32억불 | 1/30 |

* GNP 대비 지원규모 비교 : 서독(1980년) GNP 1조 4,720억 DM의 0.12%,
한국(2000년) GNI 4,552억불의 0.02%

8. 북한의 변화

- 북한은 1990년 이후 연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외화난에 직면하고 이탈주민이 증가하는 등 체제 이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조심스럽게 변화를 보여왔으며,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이후 실용주의적 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 무역법 제정(1998.3)을 통해 무역 활성화
- * 헌법 개정(1998.9)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 요소의 부분적 도입
- * 금강산 관광사업 개시(1998.11)
- * 관료·학자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 학습

<북한 경제난의 추이>

| | 1989년 | 1999년 |
|----------|---------------|--------|
| 공장 가동률 | 50% | 20-30% |
| 1인당 국민소득 | 991 \$ ('93년) | 457 \$ |
| 무역규모 | 48억 \$ | 15억 \$ |
| 원유도입량 | 272만톤 | 32만톤 |
| 농민시장 의존도 | 20-30% | 60-70% |

- * 식량 20%, 석유 50% 이상을 대외 무상원조에 의존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보다 적극적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내적으로 경제건설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의 사고와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 김정일 위원장은 2001. 1. 4 노동신문을 통해 “과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

- * 2002년도 신년사에서 4대 제일주의(수령·사상·군대·제도)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분야에서의 인민생활 개선을 제1의 목표로 추진(닭, 칠면조, 염소, 타조, 메기 사육 등)
- 경제부문에서는 개방과 자력갱생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음.
 - *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경제시찰단 파견 및 경험사절단 초청, 개방관련 법안 마련 등을 통하여 외자유치 및 통상확대 노력
 - * 노동신문(2001. 1.28)을 통해 “자력갱생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
- 정보기술산업을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의 기업과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도입에도 주력함.
- 대외관계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한 중국(2000.5, 2001.1)·러시아(2000.7, 2001.8)와 우호관계 복원 및 실용적 외교활동 강화하였음.
 - 2000~2001년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17개국과 수교함.
 - * 북한의 주요 미수교국은 미·일·프랑스이며, EU 15개국중 13개국과 수교
- 요약하면, 북한은 기존의 정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부단히 현실주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신사고’론에 입각한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경제관리에 있어 실용주의적 정책 확대,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 추구 등
-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우리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변화는 그 환경을 제공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산물이며, 변화의 양적 확대는 점차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본질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

-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 북한 정치·경제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 대남적화전전략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 대남 군사위협이 감소 등에서 큰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대북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대북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얻을 수 있는 목표이며, 단기적으로 얻어지는 성과가 아님.
 - 변화의 속도가 문제일 뿐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 체제 속성상 단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임.
- * 최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2월16일 60회 생일과 관련, 백두산 봉우리 수가 216개, 고향집 주변 눈높이가 60cm, 강설일수가 60일이라고 주장

Ⅲ. 최근 남북관계 현안

1. 북·미관계

- 2001년 6월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천명한 후 정체상태로 이어졌던 북·미관계는 부시 대통령의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긴장상황이 발생함.
- 미국으로서는 패권유지와 국제정세의 관리를 위해 '힘에 의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 '불량국가', '악의 축'에 북한을 끼워 넣은 것은 회교권과의 문명충돌 회피와 미국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한 면이 있다고 보여짐.
- 미국은 세계전략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관련성은 부차적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음.
 - "북한 도발 → 미국 반응"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며, 이는 미 공화당 아미티지 보고서(2001.7)에 잘 나타나 있음.

< 미 공화당 아미티지 정책 보고서의 요지 >

- ① 외교력으로 안되면 가능한 군사력 적절히 배합
- ②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이 감소될 수 없으면 봉쇄도 불사
- ③ 북한이 미국의 안보관심을 충족시킨다면, 관계발전 가능

-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생물화학·미사일·재래식 무기문제를 분리가 아닌 전체적 틀 속에서 함께 연관시켜 다룬다는 구상을 보임.

-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신하고 있음.
 - 미국이 정치고립, 경제질식, 군사압살, 인권압력으로 북한체제의 와해를 추구하고, 말로는 「대화」를 표명하지만 실질적 진전의 의지는 없다고 비난
- 미국이 북한의 명분·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
-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대미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북한의 대미 강경 자세와 대화 해결 입장 >

<대미 강경적 자세 표명>

- * '부시 대통령 방한은 전쟁행각·반통일행각', '대량살상무기를 많이 보유한 미국이 오히려 악의 축', '부시의 연두교서는 「선전포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고 주장(2002.2)
- * 미국이 선택하라고 호언 :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대결과 전쟁으로 나갈 것인가? 경수로 불이행을 사죄·보상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 표명>

-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AP 인터뷰에서 "동등 입장으로 전제조건없이 언제든 대화재개 준비" 언급
 - * 김정일 위원장, 중국 우둥허 대사 면담 및 러시아 풀리코프스키 특사와 회담 시 미국과 대화의사 표명(2002.2)
 - * 북한 당국, 간첩혐의로 억류하였던 일본경제신문 스키시마 기자 송환(2002.2)
- ⇒ "핵동결 해제, 미사일 모라토리움 파기" 등을 거론하지 않으며, 테러지원 등과 무관하다는 자신의 결백을 국제사회에 호소

< 사안별 북-미간 기본 입장 비교 >

□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

<미국>

- 제네바 합의 일단 유지, 이행 지지하나 개선방안 검토
- 핵사찰이 3-4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 금년중 사찰 개시
- 북한이 NPT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지원 중단
- 건설지연에 따른 보상은 불가
 - 합의서에서의 2003년은 단순 목표시한, 손실보상 근거 없음.

<북한>

- 합의 성실 이행중, 전력 손실 보상없으면 핵활동 재개
- 핵사찰은 경수로 상당부분 완료 이후 개시
 - IAEA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완전성 검증에 어려움 없음.

□ 미사일문제

<미국>

- 개발, 배치, 수출 등 포괄적 억제 및 검증
- 인공위성 대리발사문제는 논의 용의

<북한>

- 클린턴 평양 방문시, 서로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중대결단을 내릴 계획이었다고 언급(외무성 대변인 담화)
- 일정조건(위성 대리발사, 군사위협 중단)하에서는 미사일계획 동결 지속 시사
- 시험발사는 2003년까지 유예

□ 재래식 무기 위협 감소문제

<미국>

- 한국의 이니셔티브 인정하나, 북미간에도 의제화
- 일방적 감축요구가 아니라 쌍방간 신뢰구축을 협의하자는 취지

<북한>

- 무장해제 기도로 논의 불가
- 군축의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수

2. 이산가족문제 해결

-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문단 교환 3회(대회 남북 각 100명), 생사주소 확인 2회(대회 남북 각 100명), 서신교환 1회(남북 각 300명)가 이루어졌음.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생사확인·서신교환 규모 확대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제 1차, 2차 남북적십자회담)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8)에서 4차 방문단을 2001년 10월 중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반테러전쟁에 따른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연기시킴.
- 4차 방문단 교환과 관련, 이미 남북간에 방문단 명단 교환 등 제반 실무적 절차를 마친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함.
- 따라서 4차 방문단 교환 실현과 함께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교류 제도화(면회소 설치, 생사확인·서신교환 확대 등)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대북 지원

- 200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총 395만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북한내 양호한 기상 조건, 우리 정부의 비료 적기 지원 등으로 인해 2000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양임.
- 그러나 2002년도 곡물 수요 총량 총 626만톤(식용 505만톤, 공업용·사료용 등 기타 121만톤)중
 - 북한의 외상 구매 30만톤, 중국 및 WFP 등 국제사회의 지원 24만톤을 감안해도, 2002년에 약 157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 성인 1일 1인당 약 607g(정상배급) 기준으로 약 157만톤 부족, 북한이 식량소비절약정책에 따라 약 22% 감량 배급시에도 약 60만톤 부족 예상

- 특히 지역별로는 함경도 등 동북아 공업지역과 개성, 남포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타개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 2002년도 우리의 쌀 재고 예상량은 약1,380만석(199톤)이며, 재고 쌀 보관에 약1,148억원이 소요될 전망
- 또한 비료, 보건·의료 분야 등 식량 이외의 인도적 지원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2000년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
- 우리는 2000.9.18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 공사를 진행하여 2001년말 철도 및 도로 공사를 완공하였음.
- * 2002.2.12 설날에 새로 완공된 임진강역-도라산역 구간 망배열차를 운행, 2.20에는 한·미정상이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화 호응 촉구' 연설
- 현재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2001.2.8)되었으나 북측이 아직까지 발효를 지연
- 비무장지대내 공사 소요기간은 철도 3개월, 도로 6개월(지뢰제거기간 1.5개월-3개월 별도)이므로 향후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대로 공사를 계속할 예정임.

-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 김정일 위원장은 2002.1.6 러 대사관 방문 및 2002.2.10 러 대통령 전권대표 면담시 철도연결 문제 언급
- * 중국 탕자쉬엔 외교부장은 '2002 월드컵대회'와 북한 '아리랑 공연'시 중국 국민이 철도를 이용해 남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피력 (2002.3)

5.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 2001.6.8 현대-북측간 합의로 금강산관광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합의내용 : ① 관광객 수에 따른 관광대가 지불 ② 육로관광 추진 (송현리-고성 도로연결), ③ 2개월내 관광특구 지정
- 2001.10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나, 남북간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었음.
 - 우리는 남측의 송현리와 북측의 고성간 도로를 연결하되, 임시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육로관광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육로관광은 군사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면서 우선 해로관광을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였음.
 - 또한 민간에서 추진되어 온 관광사업을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하자고 제의하였음.

○ 최근 사업자의 자금난 심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금강산관광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한시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2002.1.23)

- 이는 현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간 평화와 교류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국익 차원에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국민 여론조사 결과 77.4%가 관광 지속을 지지(2002.1.2 중앙일보)

* '정경분리'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지 않고 분리함으로써 경협을 활성화시키자는 원칙으로, 이는 경협의 방임이 아니라 조성정책임. 많은 경협사업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효과 발생

< 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내용 요지 >

- ①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한시적 보조
- ②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 ③ 금강산 현지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정부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 국민의 59.6%가 지지(2002.1.24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6. 개성공단 개발

○ 2000.8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12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00.12 현대측은 개성공단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인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 o 2001.1.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최종 합의하였음.
- o 현재 남북관계 소강상태와 함께 북측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

- o 위치 :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 o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o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사양산업 300-400개 입주 예정
- o 비용 : 공단 건설비용은 약 10억불 내외로 추정
- o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 100만평, 1년 소요)

7.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o 2000년 9월 분단 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 ① 6.15 공동선언 이행, 민간인 왕래·교류보장 관련 군사적 문제 상호 적극 협력
 - ② 긴장완화, 공고한 평화 구축, 전쟁위험 제거 공동 노력
 - ③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인원·기재의 DMZ 출입허가
 - ④ 철도·도로 주변을 남북관할지역으로 설정
- * 또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5차례 개최, 「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합의서」 타결(2001.2.8)

- 그러나 북한이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보장합의서의 발효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연기시킴에 따라 아직까지 남북간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단기적으로는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 지원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것임.
-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분야 합의를 실천해 나갈 것임.
 - 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②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 ③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⑤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 ⑥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및 단계적 군축 실현
 - ⑦ (군축) 검증

IV. 대북정책과 국민적 합의

1. '남남갈등' 현황

-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과거와 동일하고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 이른바 '남남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 사회의 이념적·정치적 갈등 사례 >

<보수 대 진보>

- ① 2001년 8·15 민간교류행사 방북단 귀환시 :
'친북용공' 주장 시위 ⇔ '반통일세력' 주장 시위
- ② 2002년 2월 부시 미대통령 방한 : 반대 시위 ⇔ 지지 시위
- ③ 대북정책 평가
'잘한다', '성과가 크다' ⇔ '끌려다닌다', '성과가 없다'
- ④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변했다' ⇔ '안변했다'

2. 갈등의 원인

- 이러한 갈등은 우선적으로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의식과 문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현상'에 기인함.
 - 50여년의 적대·대결 끝에 「6·15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의 역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으나, 변화에 적응하려는 유연성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의식에 집착함.
 - 전환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인식이 정리되지 못한 채 분출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한국적 특수상황인 '상황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개념의 혼란'도 그 원인이 되고 있음.
 - 화해협력·통일을 내세우면 안보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안보·평화를 내세우면 반통일 분자로 매도
- * 북한에 대한 시각 : 동포(동반자) ⇔ 안보위협세력(적)
-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비롯된 조급함도 그 원인이라 할 것임.
 - 대북정책의 성과로서 북한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이 필요함.
 - 남북관계 진전은 장기적·지속적인 과정이므로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때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를 민족문제가 아닌 정치적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도 그 원인중 하나가 됨.

3. 갈등 극복 방안

- 남북화해로 가는 과정에서 이념적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임.
 - 6·25 전쟁과 공산당의 피해를 입은 기억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남북문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영역임.
 - 따라서 논란이 극단화되거나 폭력화되는 사례를 방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여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함.

-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19세기말 우리 민족의 국운이 일제에 의해 좌초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 * 중국의 WTO 가입 및 2008년 올림픽 유치 : 13억 인구의 시장 확대와 경쟁이라는 이중성으로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
- * 일본의 보수화 경향 : 동북아 안보에 우려
- * 미국의 반테러전쟁 :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반테러에 치중
- '상황의 이중성'과 '안보와 화해협력'에 대한 현실적 안목 및 균형 감각이 필요함.
- 상황의 이중성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함.
- 안보와 평화, 통일과 화해협력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peace-keeping(평화지키기) : 전쟁만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 평화
- * peace-making(평화만들기) :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
-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가 필요하며, 남북간 상호 의존구조가 정착될 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할 것임.
- *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는 정치·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경제·기술·정보·환경 등 비군사적 측면이 국가의 중요한 안보요소가 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
- 초당적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성공적 관리가 민족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함.

-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이 되고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받는 길은 화해협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 1994년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때, 주식이 25%나 폭락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

V.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1. 남북대화 재개 및 합의 이행

- 대화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우선 이산가족상봉,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할 것임.
 - 새로운 합의보다는 5대 실천과제(경의선,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 관광,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를 중심으로 한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할 방침임.
- 서두르지 않고 실천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경의선 복원 등을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임.
 - 경험 4대 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물적 교류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임.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이라는 원칙에서 지원할 계획임.
-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2002.2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의 식량지원 실시 등

2. 북한의 호응 유도

-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의 직접적인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함.

- 북한의 선택 가능한 변화는 경제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체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며, 어느 정도 체제 안전이 확보 될 때 적극적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서독도 동독정권이 체제존립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 동독주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정권 스스로에 의한 변화 추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대동독정책을 추진

-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진전과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 이는 남북 모두에 해당하며, 다만 55년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호 호혜적 메카니즘의 형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임.

- o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것임.

3.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 o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 반테러 국제연대라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남북간 의제와 미·북간 의제가 다를 수 있지만, 한·미는 고위급정책조정회의(TCOG)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에 기반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 o 또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VI. 맺음말

- 우리가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이나 정체국면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진전은 계속되어 나갈 것임.
 - 분단극복과 통일운동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쉬웠던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하면 큰 어려움이 아님.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기본틀을 확고히 다져, 화해협력의 틀을 향후에도 지속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올 2002년에 예정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2002년도에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진전시켜 놓아야, 2003년도에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 2003년은 북한이 동결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기간 만료 등으로 북한문제가 국제적 쟁점화할 가능성 상존

Q/A

1.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2.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국민갈등이 생긴 것 아닌가요?
3. 우리의 안보태세가 약화된 것 아닌가요?
4.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5.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6. 대북지원물자가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7.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8. 반테러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요?
9. 남북한 통일방안은 무엇이며, 공통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제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 현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세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첫째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이는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니다.
 - 둘째는 무관심정책(benign neglect policy)으로,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셋째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 1999년 연평해전시의 금강산 관광선 정상 운항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또한 2001년 미국의 테러사건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조성 등 경제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특히,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금년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야당 총재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국민갈등이 생긴 것 아닌가요?

-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혹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국민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국민 내부에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고, 남북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의 변화를 재는 잣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갈등들은 과거 '대결과 반목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한편,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우리 사회 내 진보와 보수계층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이념적 논쟁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고, 통일문제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개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협상과 관련하여 정보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의 안보태세가 악화될 것 아닌가요?

-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 없이는 안정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연합 전력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 2001년 6월 북 상선 4척의 제주해협 무단 침범사건 발생시 우리 군은 비무장 상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 무단 통과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이후 사전 신고할 경우에만 통과를 허용할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북한선박의 무단 침범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안보는 「평화를 지켜 나가는(peace-keeping)」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생각을 버리게 하여야 전쟁의 위험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peace-making)」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첫 번째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 북한은 1990년 이후 연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외화난, 이탈주민 증가 등 체제이완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외화 획득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공식배급체계 대신 농민시장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집단적 생산보다도 사적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고 수익추구 등 시장경제적 가치관이 움트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과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국제경제, 금융, 무역, 회계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배우기 위해 2001년 한해동안 500여명의 북한 학자 및 경제관리들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파견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 2001년 들어 북한은 미국의부시 행정부 출범과 국제사회의 반테러전쟁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동안 보여 온 변화 조짐은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가 축적되어 장차 북한 정치·군사분야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너무 '퍼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우려입니다.

- 1998년이래 2001년말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총 지원액은 1억 8,833만달러(2,350억원)로 국민 1인당 연평균 대북지원액은 2,200원 수준입니다.

* 2000년도 대북지원 총액(1.1억달러)은 국민총소득(4,552억달러)의 0.024%

- 또한 미국과 일본도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해왔습니다.

*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1.9억불, 미국은 같은 기간동안 4.8억불, 일본은 2억불 상당을 지원

○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평화유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01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액(913억원)은 2001년 국방예산(15조 3,884억원)의 0.59%

- 이러한 평화비용은 대외적 경제 신인도를 개선시켜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 또한 북한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결핍과 발육 부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6. 대북지원물자가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 정부는 북한에 지원된 물자의 전용을 막고,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우선 지원방식을 직접 지원 위주로 하여, 구호물자의 포장에 표시된 상표와 부착물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우리의 지원품임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측의 대북 화해의지를 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또한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품목을 ①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없고 ② 분배투명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1998년 이후 2001년 12월까지 대북지원액의 분야별 비율은 농업개발(비료 등) 분야 30%, 보건의료(의약품, 의료장비 등) 분야 6%, 일반구호(쌀, 옥수수, 분유, 의류 등) 분야 64%입니다.
- 남북간 직접지원시 「지정기탁제」를 실시하여 우리측이 희망하는 북한내 지역이나 단체에 물자를 전달하고, 북측은 우리측 지원물자 전달시 매회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측 지원물자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현지 대표의 분배과정 입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민간차원의 독자적인 NGO들의 대북지원시에는 매 지원시마다 NGO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도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 144명, 2001년 384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 한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2001년 12월 현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7.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으로 긴장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43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관광하였고, 그곳에서 다양한 남북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남북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 금강산 관광은 1999년 연평해전 및 2001년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유지, 외국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등 우리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악화, 관광객 감소 및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지연 등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 여론조사 결과, 관광지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다수가 찬성
-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동안 추진해 온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개설 등이 무위로 돌아가고, 관광재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우리의 대외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과 긴장완화 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일단 관광사업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 ▲이산가족·학생 등의 관광경비 지원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지역에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 이러한 조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며, 그 혜택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토대 위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등 관광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8. 반테러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요?

- 북한은 반테러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체제위기의식으로 당분간 남북관계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예상됩니다.

- 그러나 남북은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북한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당국대화의 침체 속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는 호응해 오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위한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테러 전쟁이 고비를 넘겨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이 약화되면 북한은 다시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서도 고립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 정부는 당분간 미·일·중·러 등 유관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 국내 여론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momentum)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9. 남북한 통일방안은 무엇이며, 공통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준비과정을 갖자는 입장입니다.
 - 이에 반해 북한은 1980년부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 연합(聯合, confederation)과 연방(聯邦, 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중앙정부」가 존재하느냐 여부입니다.
 - 연합제에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기구를 갖자는 것인데 반해, 연방제에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외교·군사권을 갖는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 한편 2000년 6월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

- 현 시점에서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의 중간단계, 과도기를 설정함
- 과도기에 남북 정부가 각각 내정·군사·외교권을 갖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함
-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함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연합기구’,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민족통일기구’로 명명)

<도표로 보는 남북관계>

I. 교류 협력 동향

(1) 인적 교류동향

- ① 남북한 인적왕래규모
- ② 이산가족 교류 동향 비교
- ③ 북한주민 접촉 승인, 성사 추이

(2) 남북 교역동향

- ① 남북 교역액 변동 추이
- ② 교역품목 변화 추이
- ③ 위탁가공설비 반출 추이
- ④ 위탁가공 교역 추이
- ⑤ 2001년도 주요 교역 품목
- ⑥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 ⑦ 남북간 물동량 현황

(3)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동향

- ① 경제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② 사회문화 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

2. 인도 관련 동향

(1) 북한 경제난 현황

- ① 공장 가동율
- ② 1인당 국민소득
- ③ 무역규모
- ④ 농민시장 의존도

(2) 인도적 대북지원 동향

- ①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비교
- ② 서독과의 지원규모 비교
- ③ 국가별 대북지원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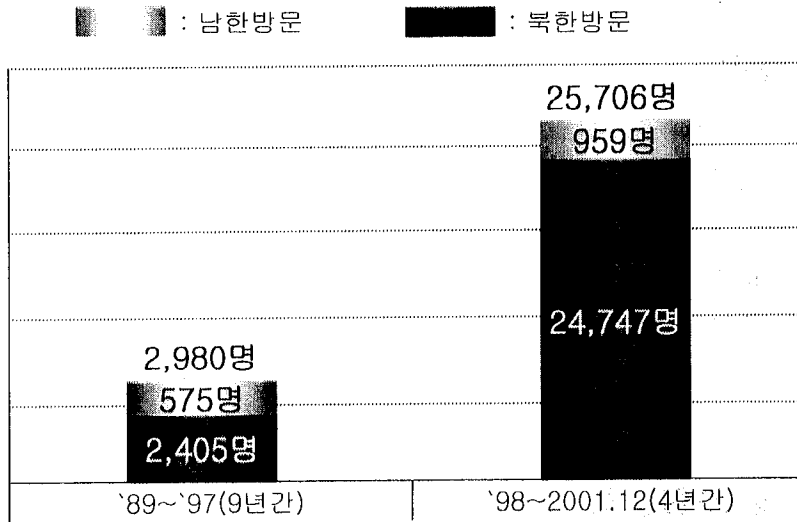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추이
- ② 2001년도 국내입국 연령별 현황
- ③ 2001년도 국내입국 직업별 현황

1. 교류 협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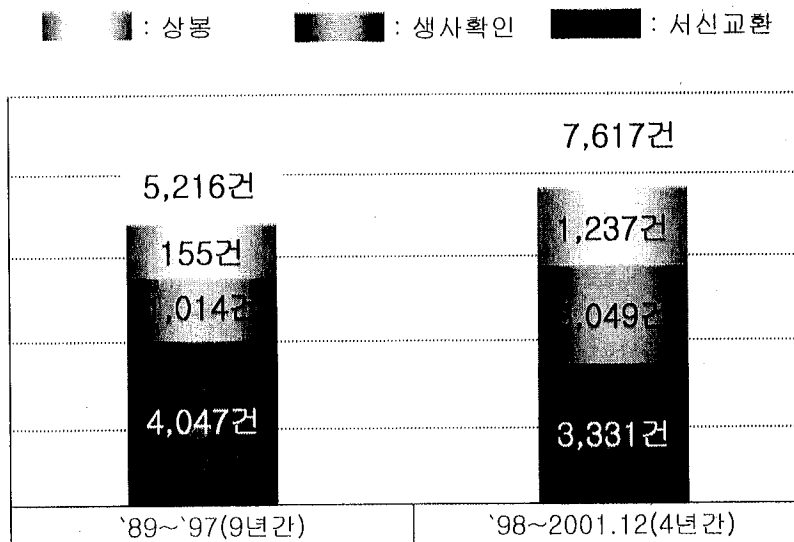
(1) 인적교류 동향

① 남북한 인적왕래 규모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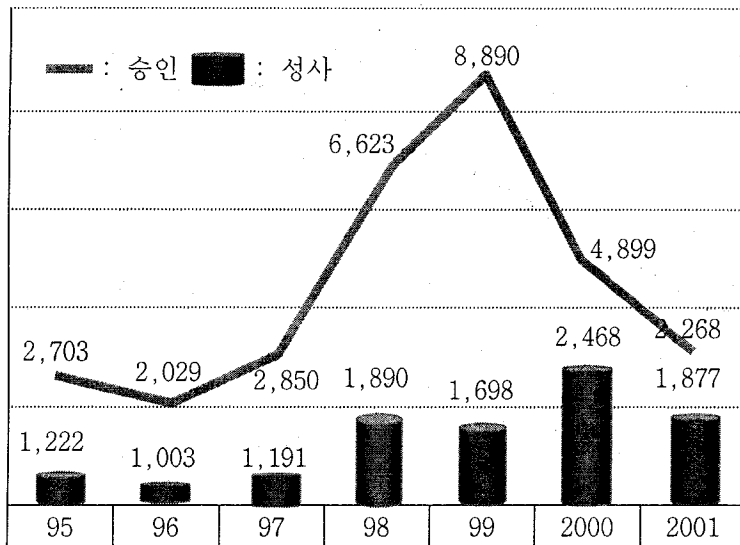
※남북간 인적왕래는 지난 4년간의 규모가 이전 9년간의 규모의 약 10배에 달함

② 이산가족 교류 동향 비교(단위:건)



※이산가족 교류는 상봉 및 생사확인 인원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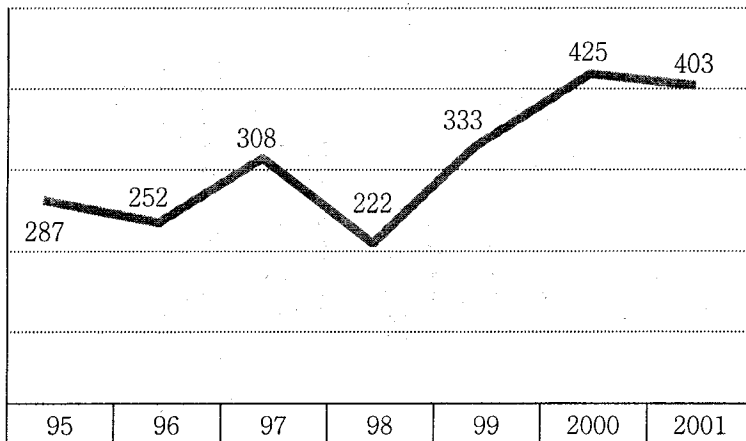
③ 북한주민 접촉 승인, 성사 추이(단위:명)



※ 북한주민 접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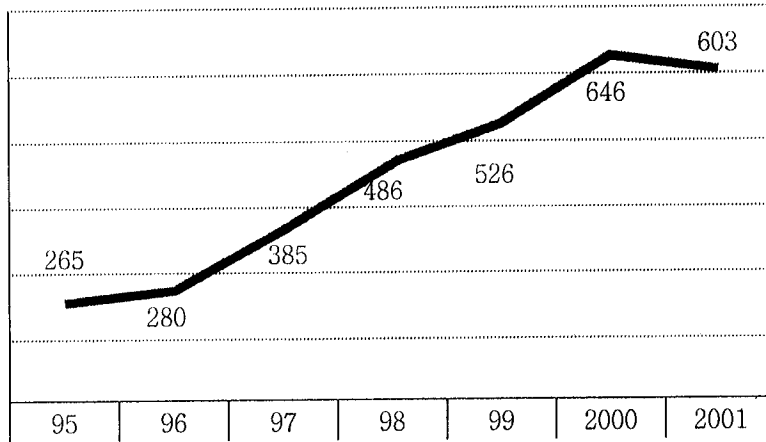
(2) 남북 교역 동향

① 남북 교역액 변동 추이(단위: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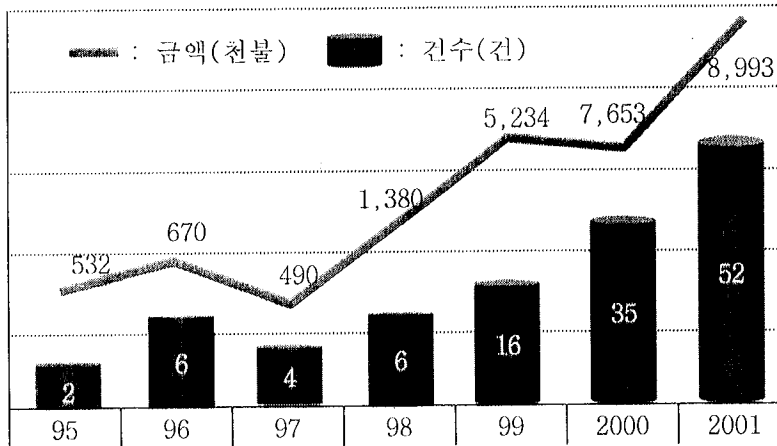
※ 남북 교역액도 꾸준한 증가 추세,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4억불대 실적을 시현

② 교역품목 변화 추이 (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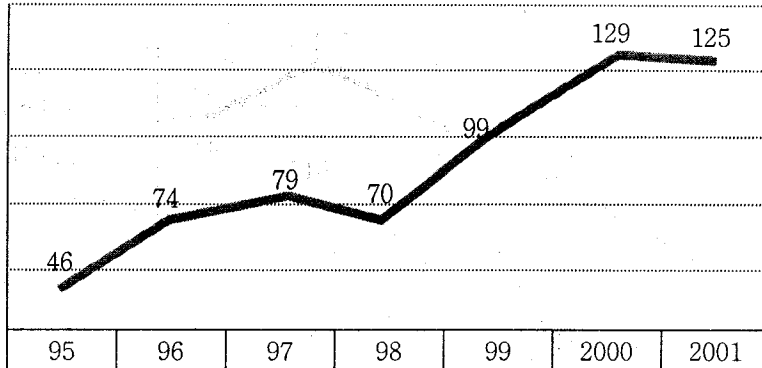
※ 교역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점차 다양화 추세

③ 위탁가공설비 반출 추이



※ 위탁가공설비와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점차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④ 위탁가공 교역 추이(단위:백만불)



※ 위탁가공 교역은 98년도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

⑤ 2001년도 주요 교역 품목 (단위:천불)

1. 반입품목(북->남)

| | |
|---------|----------|
| 농림 수산물 | (89,811) |
| 섬유류 | (54,930) |
| 철강 및 금속 | (9,887) |
| 전기 및 전자 | (8,7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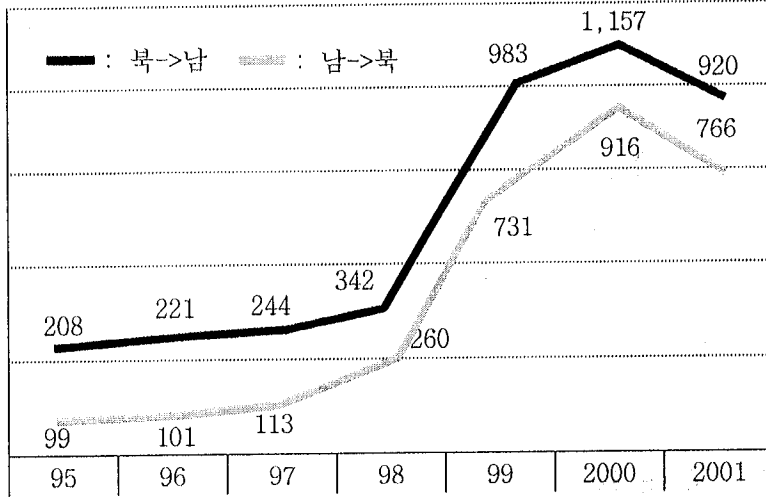
※ 교역 품목에 있어 반입품목은 농림 수산물, 섬유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반출품목(남->북)

| | |
|------------|----------|
| 화학공업품 | (63,846) |
| 섬유류 | (52,388) |
| 일차산품 | (33,189) |
| 기계류 및 운반기계 | (27,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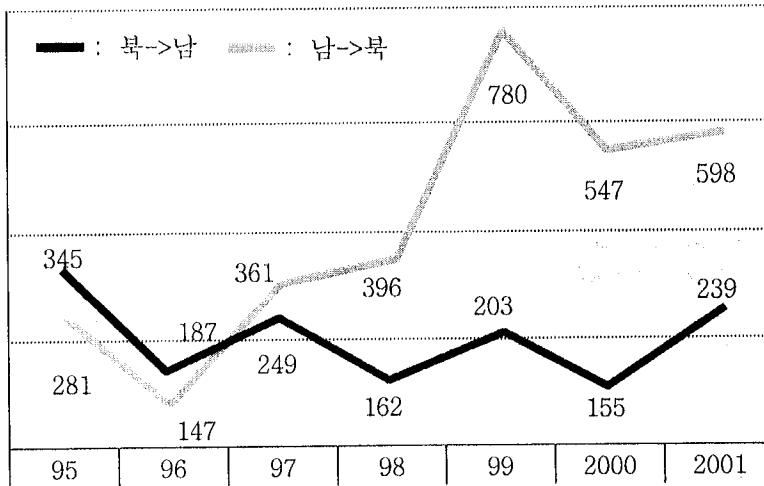
※ 반출은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

⑥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단위:회)



※ 남북간 교역의 증가추세 및 금강산 관광에 따라 선박운항회수도 점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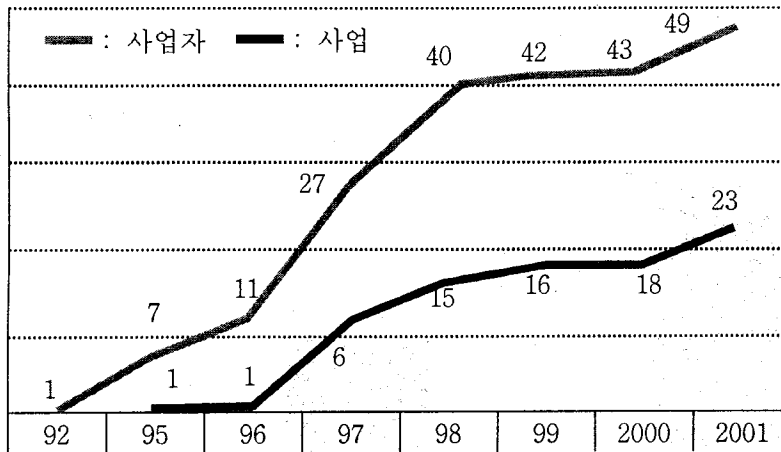
⑦ 남북간 물동량 현황(단위:천톤)



※ 남북간 물동량은 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난해에는 반입규모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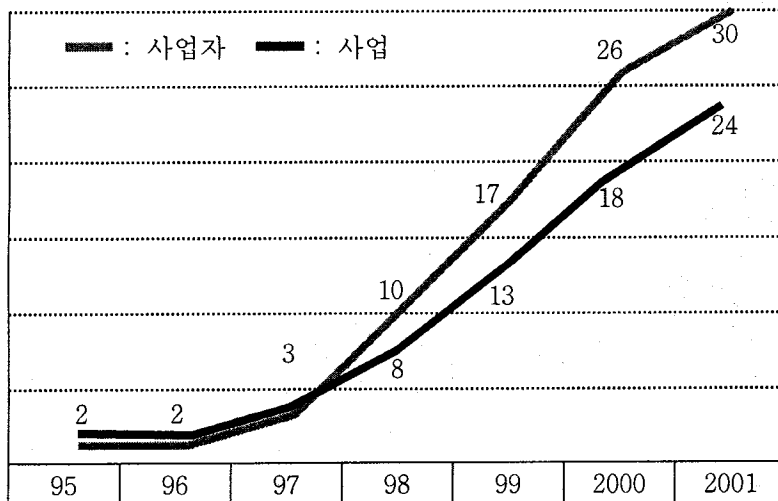
(3)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동향

① 경제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단위:건)



※ 경제협력 사업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IT분야 등으로 다양화

② 사회문화 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추이누계(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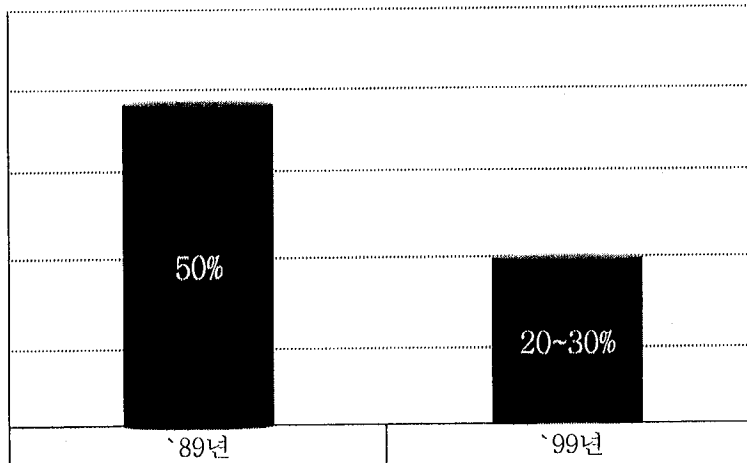


※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

2. 인도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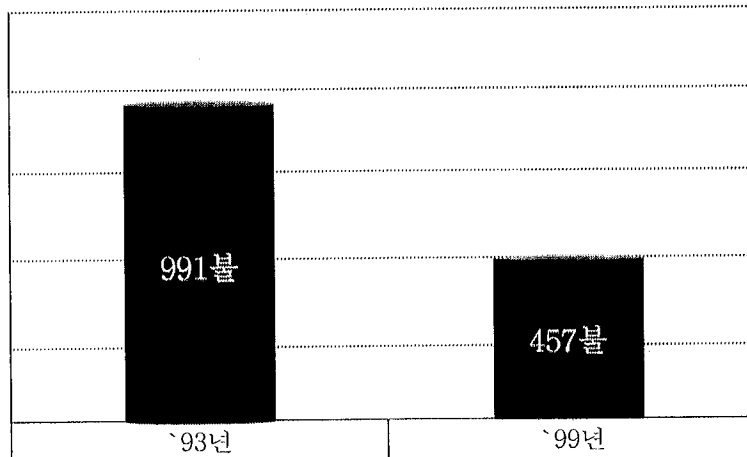
(1) 북한 경제난 현황

① 공장 가동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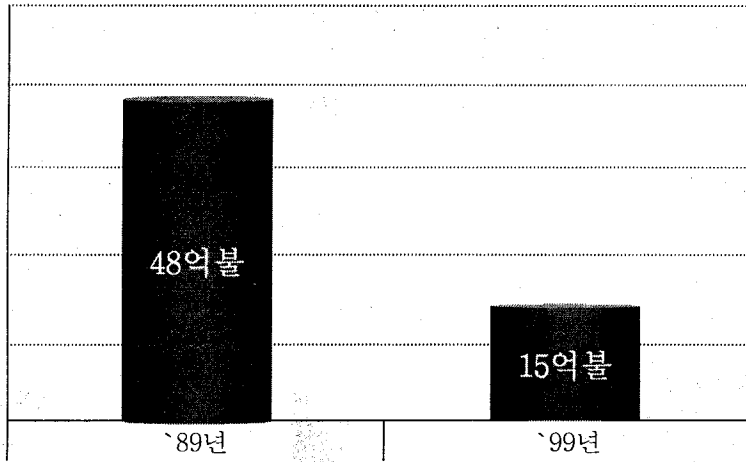
※ 전력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10
년전의 절반수준으
로 감소

② 1인당 국민소득 (단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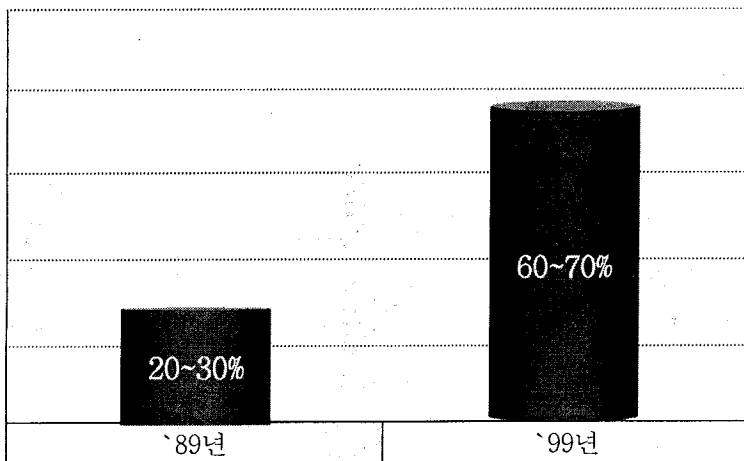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
도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457달러로
우리의 20분의 1

③ 무역규모 (단위:불)



※ 무역규모는 지난 10년전의 3분의 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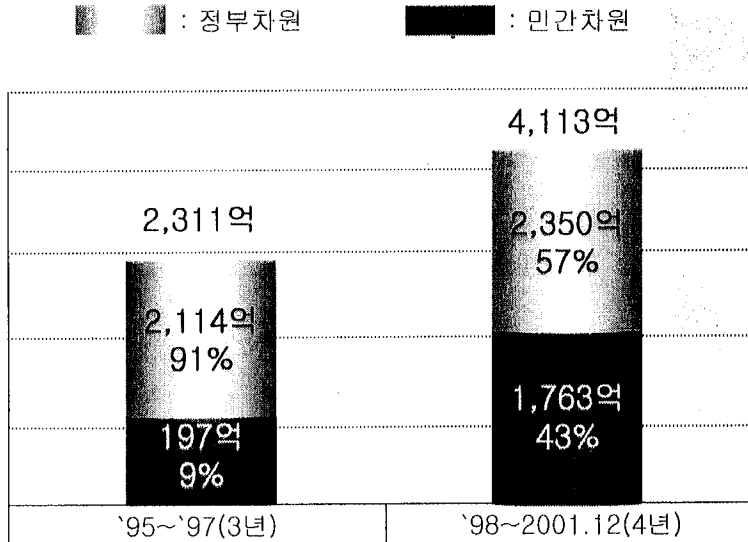
④ 농민시장 의존도 (단위:%)



※ 국가계획 시스템의 붕괴로 농민시장 의존비율이 70%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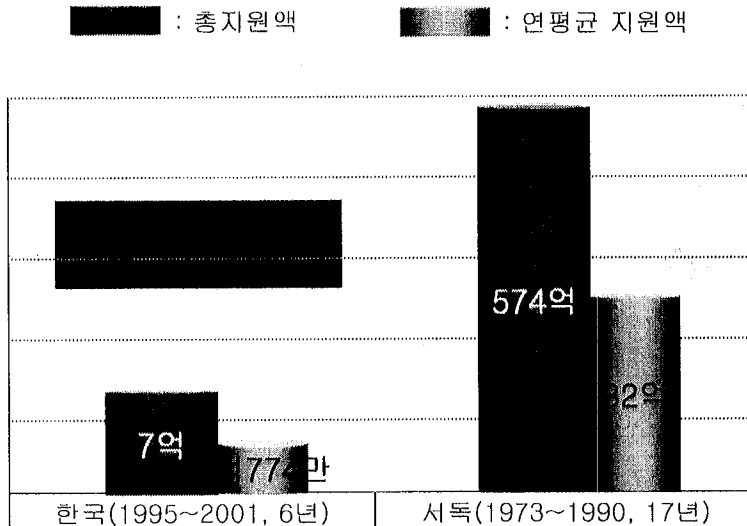
(2) 인도적 대북지원 동향

①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비교 (단위:원)








※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는 4,113억원으로 특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

② 서독과의 지원규모 비교 (단위:불)



※ 통일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금액은 총 574억달러로 연평균 지원규모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0배

③ 국가별 대북지원액 비교 (단위: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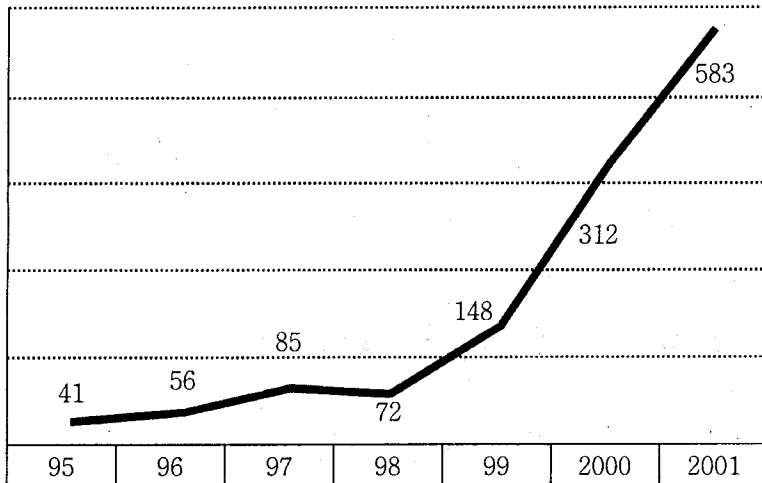
| | |
|----|--|
| 한국 |  (45,005) |
| 미국 |  (56,263) |
| 중국 |  (20,156) |
| 일본 |  (25,537) |
| EU |  (18,286) |

※ 주요국가의 대북 지원액은 미국, 중국이 큰비중을 차지

※2001년 12월 31일 기준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①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입국 추이(단위:명)



※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 추이는 2000년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83명 기록

② 2001년도 국내입국 연령별 현황(단위:명)

| 연령 | 인 원 수 |
|--------|--------|
| 10세미만 | (43명) |
| 10~19세 | (91명) |
| 20~29세 | (158명) |
| 30~39세 | (172명) |
| 40~49세 | (54명) |
| 50~59세 | (25명) |
| 60세이상 | (40명) |

※ 탈북자의 연령별 현황은 20~30대의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

③ 2001년도 국내입국 직업별 현황(단위:명)

| 직업 | 인 원 수 |
|------------|--------|
| 관리직 | (22명) |
| 전문직 | (26명) |
| 예술체육 | (16명) |
| 노동자 농장원 | (277명) |
| 서비스 | (43명) |
| 군인 | (7명) |

※직업별로는 노동자 농장원 출신이 가장 많고 서비스업, 전문직 순